

6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행정의 대응방안 제안

박지호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jh@makehope.org

No. 69
2022.08.25.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
희망이슈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소셜디자이너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요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행정의 대응방안 제안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거주자(개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와 답례품 혜택을 받게 됨.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은 현 지역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기부자를 모집하며, 원활한 기부금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결국, 지금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훑아보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함.

이를 위해 행정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은 자신의 지역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임.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상호 공유하고 고민하여 지역민 누구나 예측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내야 함.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적합한지(자연), 활용 가능한 공동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은 어떠한지(공간), 대중교통, 도로 상

황(교통) 등 지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연결 가능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은 무엇이 있는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과 역할 등 ‘인적자원’ 역시 명확히 조사하여 파악해야 함.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임. 지자체 내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풀리시랩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 공무원 풀리시랩의 시도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역 행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 일례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 재원을 활용한 정책 또는 사업은 물론, 제공할 답례품까지 지역 농축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음. 즉,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연결되어 대응해야 할 제도임.

이에 지역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풀리시랩 등의 실험을 통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결국, 여러 지자체와 달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을 발굴하여,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도 대응의 핵심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오는 2023년 1월 1일, 계묘년의 시작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거주자(개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부터는 16.5%)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이라 정의되어 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위기 상황에 봉착한 지자체 입장에서선,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민, 우리 지역을 응원하는 국민에게 최대 500만 원 이내 기부금을 모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부금 1조 원 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답례품 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재정 안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효과를 속단하고 기대감에 부풀기 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지역을 좋아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을 위해, 지역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출향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행정은 성공보다 실패의 여지가 크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맞춰 기초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설정해야 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08년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를 차용하여 제정됐다. 일본 역시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등 3대 도시권 인구집중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과 대도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관련법을 시행했다.

2008년 기부 건수 5.4만 건, 기부액 81.4억 엔으로 출발한 일본 「고향납세」는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제한도를 늘리고, 기부처리를 위한 행정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극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2020년 기준으로는 기부 건수 3488.8만 건, 기부액 6724.9억 엔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의 경우 2020년 기준 기부 건수 104,020건, 17억 6,337만 7,000엔의 고향납세를 모금했다. 가미시호로정은 오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시민의 이주 등을 후원하고자 맞춤형 기금을 설치하고, 고향납세를 활용해 육아·저출생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했다. 고향납세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활용하여 인증 어린이집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하고, 영어교육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배치했다. 나아가 초등학교 교직원을 늘려 학생이 적은 학급이라도 공교육을 제공하고, 공설민영학원 개설을 실시하여 안심 육아가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 총무성은 해당 사례에 대해 “고향납세 기금을 모아, 아이돌봄·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사업에서는 얻지 못했던 교육의 질을 높인 사업이 실시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하였고, 또 다른 배울 점으로 “기부자와 (지역이) 지속적인 교류를 갖음으로써, 기부자가 ‘가미시호로정의 팬’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편하게 이주할 수 있게 대처”

하고 있는 점을 꼽기도 했다.¹

하지만 일본 「고향납세」도 제도 시행 이후 7년여 동안 부침을 겪었다. 기부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답례품 경쟁으로 모금 기부액보다 답례품 제공에 사용한 재정이 더 많은 사례도 있었고,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는 지역은 인구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주민 한 명당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 제정 시 답례품 제공 비용을 기부금의 30%로 제한하였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 가능지역에 현 거주지역을 제외했다.

1 일본 총무성 관련 자료 요약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topics/20180330_case_study.html

III.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대비 현황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말 그대로 개인이 고향 또는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모은 기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주요 특산물(품)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이하)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한다.

이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까지 반년가량 남았다. 각 지자체들은 동법 시행령 마련이 늦어져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응이 촉박하다고 하소연한다. 제도 시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하소연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시행 전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시적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존재한다. 2023년에는 해당 기금으로 즉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기부금 모금만 할 수 있다. 즉, 직접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농축수산물 특산물(품)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널리 알려진 지역들에 기부금이 일부 쓸릴 수 있다. 또한, 2023년 중앙정부가 구축할 온라인 시스템상에 국내 지자체들의 기부금 모금 순위가 공개될 수도 있다. 대중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담당자들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 입장에서 ‘우리 지역은 특별한 답례품 거리가 없는데’, ‘기부금 순위가 낮을 것 같은데’라며 불안해하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은 현 지역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니다. 여러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매력적인 답례품에 따라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개인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그 공감이 기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개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한 우를 답례품으로 드릴 테니 기부해주세요”라는 홍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 제로 마을 〇〇개를 만드는 〇〇시(군)에 힘을 보태주세요”라는 지역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훑아보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가. 우리 지역의 미래 그리기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지속가능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 가미시호로정(町)처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상정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대부분을 무상보육 등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명확히 설계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은 행정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현 지역민의 행복에 기반하지 않은 미래는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행정, 시민사회 등이 모여 지역의 미래를 명확히 그려야 한다.

이때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이 광역지자체에 인접해 있는지, 주변 지자체와 어떤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의 산업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미래가 모두 다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상호 공유하며, 지역민 누구나 예측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내야 한다.

나. 지역 실태조사

일차적인 미래 그리기가 완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실태조사이다. 새로이 그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대응력’과 단기 ‘현실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육아가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로 정했지만, 지역 내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면 불가능한 미래를 세운 것일 수도 있다. 현 위기 상황을 ‘기대’만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물론 모금하고 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여 없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기부금의 규모와 지속성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장기사업에 기부금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적합한지(자연), 활용 가능한 공동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은 어떠한지(공간), 대중교통, 도로 상황(교통) 등 지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미래와 연결 가능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은 무엇이 있는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과 역할 등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구, 시설, 산업 등이 지역에 있는지를 지역 미래상에 맞춰 조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부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필수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IV.

「고향사랑기부금법」과 폴리시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초기 성패는 지역 자원조사의 탄탄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답례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모두, 지역의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지역만이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지역의 주요 미래 사업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필자는 행정의 변화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폴리시랩(policy lab), 공무원 교육 등을 제안한다.

가. 공무원 폴리시랩(policy lab) 실시

기본적인 지역현황조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적극성이다. 즉, 계속해서 정리될 지역의 다양한 현황 또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대한 기획 등이 필요하고 이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자체 내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폴리시랩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폴리시랩(policy lab)은 이름 그대로 정책 혁신을 위한 실험으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의 폴리시랩은 정책 자체를 혁신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정책 자체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정책 형성 및 실행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함께 또는 정부 주도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정책과정에 혁신적 방법론을 도입”하기도 한다.²

2 LAB2050, “폴리시랩은 ‘정부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중 내용 발췌.
<https://bit.ly/39b9t55>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용자가 중심이 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역 혁신의 주요 주체이다. 공공의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과 공공자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주민들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공무원 폴리시랩의 시도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는 주요한 무기가 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역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기금을 투입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답례품은 농축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결되어 있다. 즉,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물론 기존과 같이 자원조사, 실태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모두 전문영역,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필자는 지역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한다.

나.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 실시

공무원 폴리시랩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것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유관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앞서 언급한 지역 미래 그리기와 실태조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주도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리고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상기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역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부라는 생소한 영역과 정책의 결합이라는 모호함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하는 지역에는 분명 혁신과 변화를 유발할 계기이자 정책적 안정을 도모할 무기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연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어떤 지역은 전전긍긍하며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여전히 생경함이라는 핑계에 숨어 과거의 소극적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 본 글은 생경하지 않은 행정의 언어와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현재 즉각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지역의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미래 대비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역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축적해 두어야 한다. 해당 과정에는 지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공무원들은 해당 작업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모금 주체이자 기금 설치 및 활용의 주체라서가 아니라, 해당 제도가 행정의 많은 부분이 결합되어야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고, 지역 공무원들은 이미 다양한 지역자원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상당 정도 설치되어 있다. 제도적 안전장치 이외에 필자는 제정법 시행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몇 가지 대안을 이 글에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전 또는 초기에 이를 구체화한 아래 프로그램(안)을 실행해보기를 제안한다.

[표]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법」 대응방안 마련 프로그램(안)

구분	지역 실태조사	공무원 교육
1주 차	□ 공통 교육 :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활용한 우리의 미래 - 제도의 이해,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교육	
2주 차	□ 개별 워크숍 - 주민 중심 지역 미래 그리기	□ 개별 워크숍 - 공무원 중심 지역 미래 그리기
3주 차	□ 공통 워크숍 - 지역의 미래상을 확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4주 차	□ 기초 교육 : 주요 실태조사원 대상 - 지역 자원조사 방법론 등	□ 교육 및 공공정보 조사 - 지역자원 관련 정보 분류 교육 - 행정 정보 정리 및 공유
5주 차	□ 지역자원 실태조사 - 행정 정보 기반 현장조사 실시	□ 부서별 워크숍 - 주요 부서별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6주 차		
7주 차	□ 공통 워크숍 : 지역 미래 그리기 고도화 -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2차 지역 미래 고도화 워크숍 등 - 지역 미래 및 특성 맞춤형 답례품 전략 워크숍 등	
8주 차	□ 공통 워크숍 : 지역자원과 고향사랑기부금 - 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법」 대응 전략 수립 최종 워크숍	

지역이 이미 보유한 농축수산물 등 지역 특산물(품)과 천혜의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 지자체와 달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을 발굴하여,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색과 미래상의 발굴을 지역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결합을 통해 이뤄내야만 지역의 미래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속가능해진다.

「고향사랑기부금법」 대비 아직 늦지 않았다. 제도 시행의 시행착오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에 새로운 숨통이 되어줄 재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성공사례는 그러한 혁신이 가득하길 바란다.

국내문헌

단행본

- 신승근·조경희. 2022.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구로이 가쓰유키. 2021. 『시골의 진화』. 윤정구역. 더가능연구소.
다나카 데루미. 2021. 『인구의 진화』. 윤정구역. 더가능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동영. 20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국의 대응방안” 이슈브리핑 제261권. 전북연구원.
김봉진. 2016. “고향세 도입 주요 이슈와 광주 전남의 대응방향” 광전리더스 Info 제21호: 1-11.
성북신나. 2021. “지역자원조사 매뉴얼 abc”.
유병선·이창림. 2020. “고향사랑기부금제(고향세) 도입과 대전광역시 대응방안” 수시과제 보고서. 대전세종연구원.
홍근석·염명배·신두섭. 2019.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189-221.
홍근석·임정빈. 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제23권 제3호: 1-31.
희망제작소. 2022.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인터넷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AB2050> <https://medium.com/lab2050>
일본 총무성 <https://www.soumu.go.jp/index.html>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일사아를 할 하라
The Young Foundation 24명의 재발견
정정 ANIS 은갈문제총서
기술 100년
시대 정신을
social innovation
리얼타임지성포럼
아시아 사회혁신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아름다운 시니어
사회적
·기원
여러이 함께
두번째 인생살기
social innovation

호혜
와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good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 사회적 | 저아저씨,
매니페스트 | 기업가 | 이상해요.

후먼라이브러리
문화예술교육 희망할사대
김지희개개이 학원ICT 강상에
희망자리
민들기
NGO
귀농 귀촌 아카 데 미 크라우드펀딩
노란테이블
좋은 서울만들기 대학생 · 공공디자인캠프

사회적기업인포럼 도시재생
귀농 귀촌 아카 데 미
마음이 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학인포럼
0416
상상 마를 기업
프로젝트
HOPE
찾지않았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희망자주
사회적경제
리포츠클
@서울
공유경제
시민
상생
청소
노동
교육

지혜로운학교 좋은 일에도 경양이 필요하다
Think & Do Tank
행동한방
이파트너
공동체
만들기
노사동업 NGO 해피시어
누가 좋은 어워드
국회의원이가
학원ICT

천개의 직업 1000
수원평생학습관 다락수다 주아로
거버넌스 목민관
출판 : 시장지
학교 방
목민관 자
학 교 치
국민교육

Together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 @ hopeinstitute
- 02-3210-0909

THE HOP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No. 69
2022.08.25.